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2013노2778]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웅재(기소), 차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고정6082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음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

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빌딩'□'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빌딩'□'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함께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 상품권 등을 받거나 주점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카드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외 2, 공소외 1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었으며 2008. 4. 24.경 받은 50만 원은 디자인 작업을 하여준 데 대한 보수로 받았을 뿐이고,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도로교통공단은 2007. 4.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7. 1. 1.부터 1999. 7. 14.까지 도로교통공단 영상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영상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9. 7. 15.부터 2012. 2. 8.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교육사업본부 교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교재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하였고, 2012. 2. 9.부터 2012. 11. 20.까지 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에서 교육 행정업무 및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공소외 2, 공소외 1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교육교재의 인쇄 등 제작을 수주받아 책자를 제작하여 이를 도로교통공단에 납품하는 공소외 5 조합의 영업사원으로, 위 공소외 5 조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를 받는 산하 인쇄조합으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등은 위 공소외 5 조합의 조합장인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5 조합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다음 수주량을 늘리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비로 정하여 인쇄물 발주가 많은 관공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향응 등 접대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빌딩 인근 노상에서 위 공소외 2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만 원 권 상품권 3매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8. 4. 24.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4,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22:3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빌딩 '□'주점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공소외 1로부터 '인쇄물을 납품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 ◇◇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주대 3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 1. 20.부터 2011. 2. 17.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5 조합의 법인카드로 총 1,61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 합계 789,000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